

쇠락해가는 광주 구시청사거리... 폐업 줄이어

코로나 못 버티고, 손님은 줄고 업주들 “세 비싸고 사람도 없어” “축제·행사나 있어야 복적거리”

한때 호남지역 최대 상권이었던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인구 이동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청춘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구시청 사거리(현 아시아음식문화거리)의 경우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정도로 문을 닫는 가게들만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 19 여파로 ‘스스로는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곳곳 임대 현수막... “상권 죽었다”

“여기가 ‘광주의 명동’ 맞나요?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람도 가게도 다 제가 들고 온 것과 다르네요.”

지난달 서울에서 광주로 여행을 떠난 문한열(27)씨는 광주 최고 핫플레이스라 들었던 충장로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다. 여행 전 가려고 계획했던 충장로의 한 가게는 문을 닫았고, 시끌벅적할 것 같았던 거리의 모습은 그저 ‘뿡’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광주 동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인근 상가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고 거리는 인적이 없어 황량한 모습이다. 배달 매출이 있는 몇몇 가게들만 불이 켜져 있다.

문씨는 “외지 사람들에게 ‘충장로’는 광주 여행의 필수코스다. 구 전남도청 등 5·18의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가’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며 “그런데 막상 와보니 대부분의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고, 갈 곳도 즐길 거리도 없었다. 변화가라는 말이 무색한 모습에 실망만 했다”고 말했다.

‘구시청 사거리’라 불리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와 인근 인쇄의 거리 상황도 비슷하다. 과거 평일·주말 가릴 것 없이 저녁이면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던 모습과는

달리, 현재는 폐업한 상점들로 가득했다. 이곳에서 ‘임대’ 현수막을 붙이고 있던 상가 건물주 이모(66)씨는 “최근 대부분의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떠났다. 목이 좋아 예전같으면 공실이 금방 찾을 텐데, 현재는 손님이 없으니 월세·관리금을 줄여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고객 성향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싶어 다양한 업종을 받아봤는데도 상황은 비슷했다. 결국 이 거리 자체가 이제 잊혀가고 있는 거다. 마땅한 대안도 없다”고 씁쓸해했다.

● “상권 활성화, 고유의 콘텐츠 필요”

16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장·금남로의 소·중·대규모 공실률은 24%였다. 이는 광주 전체 공실률(15%)에 비해 약 10%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이 지역 공실률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욱 커졌다. 2019년 13%였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27%까지 치솟았다. 소규모 매장 공실률 또한 2019년 4.9%에서 3년 새 13.1%로 불어났다.

지역 상인들은 도심 주거·상업 시설 등

이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인근 편의점주 김복만(68) 씨는 “충장로 거주 인구는 동구에서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 비싼 임대료 등으로 생활 인구가 다 빠져나간 탓이다. 그만큼 일상 소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며 “예전과 달리 지금은 충장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가 아니고서는 복적대는 건 꿈도 못 꾸다. 상인들의 힘으로는 당장 타개하기 힘들다. 지자체와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승일 충장상인회장은 “지자체에서 ‘충장 르네상스 사업’ 등 여러 지원들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게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며 “‘충장로만의 콘텐츠’가 필요하다. 대구의 김광석 거리처럼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상인들 간의 심도 있는 고민과 노력이 절실한 때”고 전했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충장 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해 구간별 특화거리 조성·충장영화제 등 이곳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충장로가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성현기자 sunghyun.jung@jnilbo.com

5년만에 장애인 시외이동권 재판 재개

장애단체 “휠체어 리프트 설치” 2017년 금호고속·광주시 고발 법원 “5월18일까지 자료 제출”

광주 장애인들이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오랜 연기 끝에 재개됐다. 2018년에 첫 변론기일 이후 5년 만이다.

16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나경)는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미설치와 관련 뇌병변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과 광주시에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2017년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도입하라며 광주시와 금호고속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한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지만 이후 피고의 증거 제출 미흡, 대법원 유사 사건 계류 등의 이유로 5년 동안 재판이 중단됐다.

이날 원고 측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충남고속, 한양고속 등의 사실조회요청회신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충남고속과 한양고속은 각 1대씩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로부터 3500~4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



16일 광주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촉구하며 금호고속과 광주시에 제기한 소송 재판 변론기일을 마치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됐다.

원고 측은 “금호고속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도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업계 1위로 평가되는 금호고속이 재정 여건

을 이유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고 측은 광주시에게도 “소송 이후 지난 5년간 장애인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고속버스 리프트 설치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는 “금호고속은 광주에 소재한 기업이 아니다”며 광주시가 피고로 지목된 데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금호고속 측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정부·지자체 지원 없이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고속 측에 재무 자료를, 광주시에 시외버스 편의 증진 및 지원 계획 등의 자료를 마련해 5월18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일에 열린다.

글·사진=강주비기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